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향락



한 때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인사 뒤끝에 'X강-X중-X약'이라는 마저 선거판에서나 있을 법한 말이 떠돌았다. X의 합친 숫자는 23. 당시 일선 23개 시·군 교육청(여수·여천교육청 통합 전)을 이르는 말이다.

강·중·약은 교육장과 관리과장 간의 '파워 게임'을 뜻한다. 교육장의 목소리가 크다면 강이요, 두 사람 모두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중, 관리과장이 한 수 위라면 약으로 분류했던 것이다. 보통 '12강-5중-6약' 정도로 교육장이 단연 우세였지만 어떤 때는 이 구도가 깨지는 경우도 있었다. 관리과장은 '돈줄'을 쥐고 있기에 나름의 파워가 있었다.

투명성·공정성 담보 안돼

당시 여천교육청을 주무르던 모 과장은 분청에서 세를 과시하던 모 인사가 교육장으로 부임하자 "형님, 지금까지 교육청을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형님이 오셨으니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겠지요"라고 말하던 것이다. 말투보여 두 사람이 막역한 사이이자, 소위 쟁기는 것을 '형님'에 게 넘기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청렴하고 강단이 있었던 A모 전 교육감은 제임시절 발령낸 모 교육장이 감사의 뜻이라며 1000만원을 내놓기에 "회식비로 50만원만 두고 나머지는 가져가라"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무늬만 '교육장 공모제'라면

다. 나도 받지 않을 테니 너 또한 '검은 돈' 쟁기자 말라는 경고였던 셈이다. 과거 교육장의 '인사 값'이 기천만인 운운했던 것은 관내 교원 인사와 각종 공사와 관련한 예산을 교육장이 한 만큼 어떤 식이든 '남는 장사'이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주일 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목포 교육장의 공모제 무산과 나주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의 상습도박과 관련해 거듭 사과를 표명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 "처음 시행 하는 만큼 미리 예견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숙한 점이 있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했다. 하지만 "탄산식적으로 삼아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 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공모제 시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실질, 교육장 공모제는 실보다 득이 더 크다는 개연성은 다분하다. 교육장이라는 자리가 보수 성향의 기득권 세력이 대물림 해온 상황에서 교육개혁은 항상 뒷전이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공모제는 심사위원 절반 이상을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 추천토록 한 것이나 일선 학교장들에 대한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공모제는 '교육 마피아'로 불릴 정도로 학연, 지연 등 북마

전처럼 얽힌 교육계의 인사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듯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모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목포시 교육장 공모 취소와 관련해 갖가지 잡음과 의혹이 난무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심사 전 심사위원의 명단이 유출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공모추진위원의 대부분이 장 교육감 영향권 내의 인사라는 사실은 한마디로 공정성 상실이다.

특히 교육감 선거 전에 장 교육감의 도민추천위원회 위원과 교육청 응모자 추천인까지 심사위원에 선정된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다. 줄을 세우고 편을

가르든 공모제라면 '무늬만 공모제'일 뿐 교육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교육계의 혼란만 부채질할 뿐이다. 절차상 투명하지 않고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공모제 확대는 교육비리를 근절하기는커녕 또 다른 비리를 낳을 수 있다.

교육감 '일방인사' 개혁 역할

장 교육감은 사실 순천대 총장까지 지낸 오랜 교육경력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이라는 울타리는 생소할 것이다. 취임 벽두부터 교육국장장과 초·중등과장의 대기발령을 지시했다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인사라는 여론이 일자 "인사를 잘 몰랐다"며 하루만에 철회하는가 하면 임기가 보장된 일선 교육장들에게 일괄 보직 사퇴를 요구해 물의를 빚었다.

또한 일부 관리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순천대에서 함께 근무한 서기관을 실제인 전남교육발전기획단장으로 끌어들이고 사무관을 비서실장에 기용해 '코드·정실인사'라는 논란을 야기한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자체 승진의 기회를 차단한 서까지 자기 사람을 심는 게 교육청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다. 처음이니 몰랐고, 대학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것은 강변일 뿐이다.

인사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을 갖춰야 한다. 밀어붙이기식 인사는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일이다. 'X강-X중-X약'이라는 구태가 다시금 등장할 지도 모른다. <논설주간> hshsin@kwangju.co.kr

시설

政爭으로 민생 발목 잡는 정기국회 안돼야

18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오 늘부터 100일간 열린다. 여야는 벌써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물밑 '살바 싸움'을 벌이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역시 정쟁(政爭)에 휘둘려 민생과 예산이 발목 잡히는 구태(舊態)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올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위기로 치달고 있는 남북관계, 참체의 늪에서 장기간 신음하고 있는 서민·지방경제, 갈수록 깊어가고 있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등 국내외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개헌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각종 법안과 과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파행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올 정기국회의 일정이 너무 빠듯해 국정현안이 제대로 다루질지 의문이다. 우선 새 총리후보자 인선이 조만간 이뤄진다면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와 겹친다. 초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허비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10월 초는 민주당 정권대회가, 11월 중순에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각각 예정돼 있다. 민생과 예산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소모적 정쟁으로 날을 지새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여야는 이번만큼은 대화와 타협으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상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 현안부터 쟁기는 탄력성 있는 의사운영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올 정기국회는 여야가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지방 죽이는 '수도권 규제 완화' 좌시할 건가

서울·인천·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를 담고 있는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 공세를 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는 각종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의도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의 취지는 대학 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공과세 등을 통해 수도권의 과밀·비대화 현상을 막자는 데 있었다. 그런데 수도권 내 한나라당 의원 44명은 아예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현실화된다면 지방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당장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각종 인센티브가 사라져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뻔한 일이다. 광주·전남지역에 동지를 튼 기업들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U-턴할

것이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수도권의 집중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9.1%, 대학교 39%, 공공기관 84.4%가 몰려 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출범 이후 국제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반면 균형발전은 도외시했다. 비수도권의 낙후성은 심화되고 수도권과의 상대적 박탈감도 더욱 깊어졌다. 지방 출대가 오죽했으면 현 정부를 '수도권 정권'이라고 하겠는가.

이제는 지방이 힘을 모아 정부와 수도권을 향해 투쟁하는 외에 달리 길이 없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와 정치권이 생존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허용한다면 지방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피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고



정종순

과거 경영학도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부분 '이윤 극대화' 또는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에 같은 질문을 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답변하는 수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자연인 아닌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의무가 주어진 것이다.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경영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범위는 경제적 법적인 것에서부터 윤리적 자선적인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

화된 사회공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나눔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은 농협의 대표적인 나눔경영활동이다. 농촌사랑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협력을 수렴함으로써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문화 여성대학', '농촌 의로지원 활동',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사랑의 집 고치기', '미소금융·햇살론'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규모는 지난 한 해만도 1134억원에 이른다.

지역사회공헌 선택 아닌 필수

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은 실현된다. 이런 이유로 사회적 책임에 속하는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경영의 핵심요소로 오르고 있다.

기업의 활발한 사회 공헌 활동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폭넓은 선택과 기회를 제공한다. 민간 복지자원의 증대를 통해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민간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기업으로서는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지지를 얻게 되고, 사회공헌 활동이 소비자들의 윤리적 구매 행동으로 이어졌으로써 수익증대와, 회사에 대한 종업원들의 자긍심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사회에서 농협은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나눔경영을 전사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체계

농협은 다른 기업체와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농촌결혼여성이민자 모국 방문사업이다. 외국인 여성농업인 가족 중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선별해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195가정(763명)에 왕복 항공권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606가정(2361명)의 모국 방문을 지원했다.

오늘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가 절실해 요구되는 사회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꼭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같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단순히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지엽적 사고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희망을 심어주는 은행이야말로 진정한 향토은행이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학업 보다 취업준비 몰두하는 대학생들 안타까워

대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 때문에 대학에서 순수한 학문적 연구보다 입학과 동시에 취업준비부터 몰두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큰 손실이자 문제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학에서는 인간적 소양과 삶의 깊이를 배울 수 있는 교양과목과 인문학 전체가 버림받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반면에 취업용으로 개설된 2학년짜리 토익 듣기 평가 강의 같은 곳은 학생들이 넘쳐나서 아예 수강신청 때 새벽부터 나와서 진치고 있을 정도다.

학생들이 취업을 중요시 하는 거야 나무랄 수 없지만 그 저변에는 우리 사회가 취직

위주를 넘어서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출세나 부를 중시하는 인식이 학생들에게까지 완전히 뿌리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착잡하게 한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 10년만 간단히 지금 현재 학문 수준으로 인정받는 과목들이 이를 넘겨받을 후속 세대가 없어 대학의 인문학 강의는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상식과목으로 후퇴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대학의 인문학 공동화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나라 교육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슬·목포시 영해동

은핀칼럼



송민석

불발더위 속에 관문점에 다녀왔다. 천안함 사태 이후 팽팽한 긴장감이 깔려있었다. 원래 널분리라는 작은 마을이 휴전협정 당시 중국식 이름인 관문점으로 바뀌면서 냉전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태풍의 눈이 되었다.

올해가 6·25발발 6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점이 분단현장을 찾는 이들을 숙연하게 하였다.

비무장 지대 능선을 따라 6·25 동족상잔의 피 튀기고 애절했던 흔적과 상처를 돌창한 숲과 들이 덮고 치유되고 있는 줄이었다. 10일 동안 주인이 열두 번이나 바뀌는 대월전으로 1m 이상

숨기고 '공화국은 행복한 인민들이 사는 지상낙원'이라는 통 큰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천안함 사태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격려되는 남남갈등이 심각하다. 우리 사회 전체의 보수와 진보 지향성을 반영하기보다 엘리트집단의 세력싸움 성격이 다분하다. 특히 최근 한반도정세가 급변하는 조짐들이 보인다.

더 이상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국론결집에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뒷전에서 무책임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될 일이다.

통일 없이 한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낮아진 백마고지와 같은 생체기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곳이 휴전선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7월 하순의 무더운 여름날 총성은 그쳤지만 휴전선 곳곳에서 죽어간 국민의 외마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들의 외마디 속엔 죽음으로 지켜낸 '나의 조국'이 있었다. 벌써 우리는 그 외마디에 담긴 조국의 절실함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국민의 90% 이상이 분단 이후 세대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화 이후 세대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 개인주의, 물질주의에 익숙해져 통일에 따른 비용과 고통분담을 꺼리는 성향이 높다. 나아가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 역시 기성세대와는 사뭇 다르다.

현재 세계라는 관중석에서 한반도를 볼 때, 북한은 얼벗고 굶주리는 최빈국의 하나인데 비해 한국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큰 몫을 하는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등장했다. 지금 북한은 세계 160위 최빈국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통일세' 역시 논란이 뜨겁다. 분명한 것은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 적게 들고,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통일은 국가와 민족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확대를 가져다주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은 특정세력이나 특정 집단의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통일의 과정에서 발생할 혼란과 비용은 국민 모두가 참고 견디어 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은 통일 30년 후 독립을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골드만 삭스사는 전망하고 있다.

지구촌 무한경쟁시대에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통일의 문제는 우리 민족 생존전략차원에서 불일이다. 통일은 글로벌시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전남통일교육센터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핀상'을 수여 합니다. 은핀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핀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No Equal Drum) advertisement. Text describes a festival an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dplane.

광주日報 (The Kwangju Ilbo) advertisement. Includes publication details, subscription rates, and contact information.